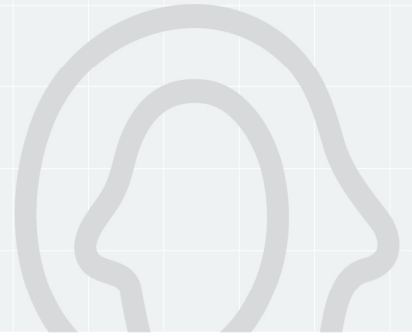


권두언

자살예방 정책 현안과 향후 과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황태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며 일궈 낸 경제적, 문화적 성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에는 국회에서 자살예방포럼이 시작되어 5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리실이 주관하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낮추는 목표를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2023).

자살률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31.7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 9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자 수는 1만 2906명으로 전년 대비 446명(3.3%) 감소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2021년 26.0명에서 25.2명으로 줄어 들었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9세 이하, 20대, 70대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고, 10대와 40대에서 증가하였다. 자살 추세를 볼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10대 청년층의 자살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미디어 속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자극에 취약한 10대에게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인터넷과 SNS의 확산, 유튜브, OTT 등 신종 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자살 유발 정보가 5년 사이 9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이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살 유발 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 언론의 자정 노력, 국민의 이해도 증가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 전국 77개 응급실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총수는 2만 6538명이었고, 여성이 65.2%, 남성이 34.8%였다. 연령은 20대가 27.9%로 가장 높았다. 자살 시도 동기는 정신질환이 38.1%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가 18.9%, 말다툼 등이 10.3%였다. 2015~2022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살사망자의 93.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주변인의 경고 신호 인식률은 24%에 그치고 있고, 인식을 하고 난 후에도 걱정은 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46%에 이른다. 자살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 준다.

2004년 이후 국가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산화탄소, 농약 중독 자살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자살 위해물건 고시 제정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 접근성을 차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 500만 명 이상이 생명지킴이로 양성되었고, 2018년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가 출범하여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 확충이 되어 늦게나마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었다. 2019년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출범, 2021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등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스럽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물론 건강한 노동시장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살률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자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지만, 현재 만들어진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기획과 예산 배정 기능은 물론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와의 상호 유기적 시스템 등을 포함해 보아야 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력과 시스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 위주 정책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주민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의 원인에 접근하여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 자살예방 전략을 위한 시행지침(LIVE LIFE)에서는 자살예방 실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여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1) 상황분석, 2) 다부문 협력, 3) 인식 개선 및 옹호, 4) 역량 개발, 5) 재정 확보, 6) 감시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자살예방을 위해 전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때,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2월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자살률은 국가의 연대, 결속, 공동체성을 포함한 국민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지표이므로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1)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메시지 확산, 2) 지역·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3)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제도 마련, 4)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추진 전략과 여덟 가지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사회 각계 자살예방 전문가들과 범부처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과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기초를 살펴볼 때 다음의 주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국가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관계 부처, 지자체 협력은 생애주기별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법에 명시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당겨지면 국민이 쉽게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고 우울 증 등을 치료받아 자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살예방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고위험군 지원 체계인 자살예방센터는 광역, 기초 센터 모두 자살예방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실제적인 자살 유발 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의 고도화와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 자살시도자나 유족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8~30배 높으므로 이들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사례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생명지킴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생명존중 인식이 부족하므로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자살률 추이와 함께 기간 추진되어 왔던 국가 자살예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변성 때문에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범사회적, 범정부적, 범시민적 역량, 정책과 재원을 확보하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국민 모두가 자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면 한다. ■

참고문헌

국민통합위원회. (2023).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정 책자료집.

국회미래연구원. (2021). 높은 자살율, 무엇이 문제이고

-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자살예방 기
본계획 ('23-'27).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예방
백서.
- 세계보건기구. (2021). LIVE LIFE 자살예방 지침서-
국가 자살예방 전략을 위한 시행지침.
- 통계청. (2023). 2022년 사망원인통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제3차 자살유발정보예
방협의회 회의자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2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2 응급실 기반 자
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